

투데이 칼럼

국민의 권리 되찾은 학생운동

지난 11월 3일은 제9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시작은 전남 나주역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한 데서 발단이 됐다. 하지만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계기를 두고 엇갈리는 설이 있다. 흔히 알려진 것은 광주교보생 박준체가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들이 사춘누이의 땀기머리를 닦기며 희롱하는 걸 보고 일본 학생을 후러친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다. 한·일 학생 간 패싸움으로 발전했는데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들만 체포해 편파수사를 하자 한국 학생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항일 시위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 광주교보 2학년이었던 이기호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주장은 좀 다르다. 일본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고 이른바 '땀기머리 희롱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학생운동이 '어린이들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땀기 희롱'을 들먹였다는 얘기다. 이 세는 근본 요인은 광주교보생, 나아가 전 조선인 학생들의 누적된 분노였다고 했다.

어느 설이 정확하자는 잘 모른다. 다만 그때 광주학생운동은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으로 민족대표들이 구속되자 학생들이 담당한 실질적 항쟁운동의 전개, 1920



고재호
수필가

년 이후 치밀한 조직력과 저항력으로 이룩한 1926년의 '6·10만세 학생운동', 그리고 1927년부터의 '학생맹행운동'을 계승한 운동이었다. 그 후 학생들에 의한 독립운동은 1943년 5월 27일 광주서중의 항일학생운동으로 이어져 광주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민족·민주사적 맥박속에 중요한 주류를 이루었다. 국권상실기에는 반식민·민족독립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수립된 후 6·25 때는 반공과 반북력의 국민생존권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안목기였던 권위주의 독재정치 아래서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기수가 되어 4·19정신으로 그 맥이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생들은 정치적 불의(不義)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존을 일깨워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눈부신 햇살의 금지탑을 세웠다. 오늘날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사관들에게 수사를 받은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고문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국민의 감정이 더욱 격앙되어 시위는 더욱 확대됐다. 다급한 전두환 정권은 서울에만 2만5천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고, 전국에 5만6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원천봉쇄에 들어갔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6월 29일,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직선제 수용 카드를 제시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고, 김대중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6.29 선언이었다.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정권이 풀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이 점차 힘을 잃게 됐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사라진 후 운동권의 관심사는 노동권, 소수자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부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학생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이에 기성 정치인들은 확실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가족을 지키는 작은 실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모든 도로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착용률이 88.5%에 이르지만, 뒷자석 착용률은 30.2%에 불과하다. OECD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 수치보다 그리 높지가 않은 수준이다.

뒷자석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 위험을 약 32% 감소시키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경찰청 연구 결과기있다.

실무에서도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사고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집중홍보, 현장계도 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사고 후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단속을 피한 행위가 아니라 안전띠를 매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 작은 습관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지킬 수 있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서우 김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민주당, 8년만에 하원 탈환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하원 승리를 자축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공항 건설사업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저변에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밖에 다시 불씨를 지펴야 한다.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한 작업이 초장부터 터덕거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작 단계의 예산이 엄청난 거액도 아니고 겨우 25억 원이었는데 말이다. 전북도와 도민들이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그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새만금에 짙바리 대화를 유지했으므로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그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북 발전은 예산이 말한다. 예산 확보가 없다면 발전 사업은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은 견인할 프로젝트 사업들의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야겠다. 청사진 보여주는 게 요란해도 정부가 냉정한 반응을 보이면 그뿐이니까 말이다. 전북도는 보다 치밀해야 한다. 발전 청사진 공포 전에 사업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새만금 공항건설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을 발족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답답하다. 물론 이같은 불만 토로는 전북도를 탓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발굴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추진의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전북 발전 사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이 기대하는 바는 새만금 공항 건설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북도의 요구에 기대해보라는 듯이 말을 한 때 도 있지만 달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기일층 노력해야겠다.

저변에 행정부지사와 정무 부지사 도지사가 릴레이 행보를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더 애를 썼으면 한다.정북 항공의 현주소를 보면 변방 그 자체이다. 변방의 낙후를 떨쳐버리려면 건설사업을 속히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 지금 전북도의 실력발휘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들도 협조해야

노인 일자리가 아쉬운 요즘이다. 일하고파 하는 노인이 많은데도 일자리 공급이 적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도가 귀찮은 소식을 전해왔다.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올해 3만23명보다 1만26명이 늘어난 4만149명의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일자리 3만 개를 위해 813억 원을 투입했으므로 더 많은 돈이 내년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어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도 부족한 판에 노인 일자리까지 신경쓰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 중에는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도 있다. 노인 실업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노인에 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살림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여생이 즐거울 터이다. 그러면 지자체도 그만큼 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할 말이 있다.우리 전북 지역에 노인 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인 일자리 마련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외면한 기업들이 많은 탓이다. 그래서인데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에 기대한 민립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는 시간제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소망스럽다.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는 좀 그렇다. 출근과 퇴근을 위한 교통비가 아쉬울 정도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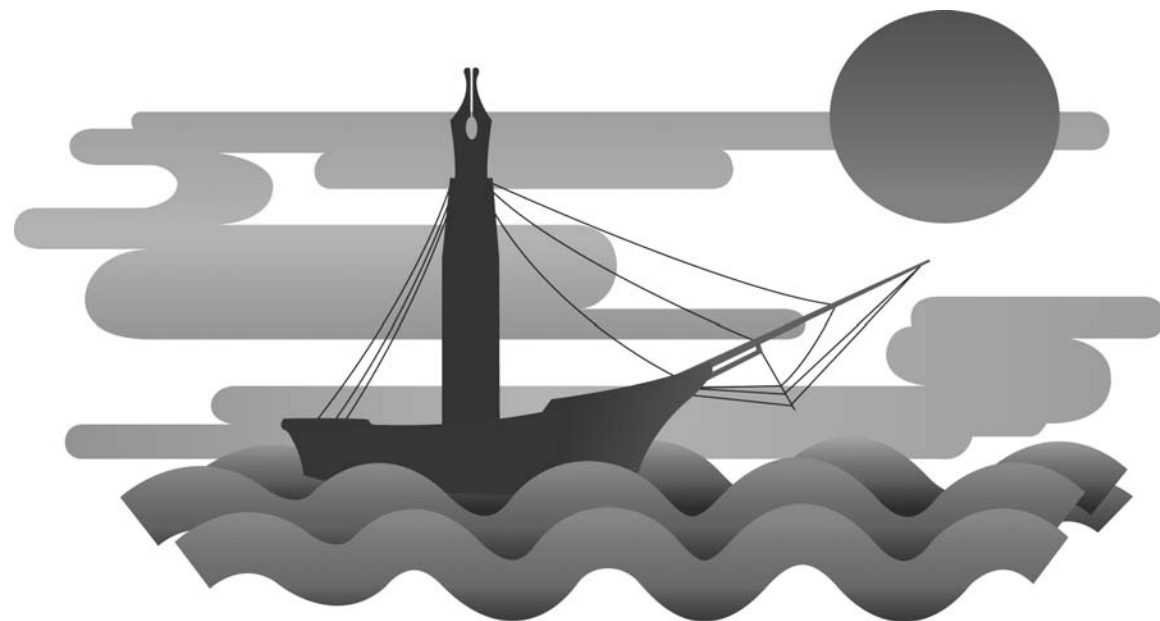
저변에 약속한 일자리가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그래서는 곤란하다.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알량한 일자리를 조금 내놓고서 협조했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낮 두꺼운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쓸 게 아니다. 노인들은 경력이 풍부하다. 노인 일자리 마련에 기업들도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